

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희생자 추모 공간 만든다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5주기 추모식

유가족협 주관 100여명 참석·에도 추모사 “안전 사회 구축” 한목소리 재개발 일한 ‘연결 녹지’ 중 약 100평 조경 변화 특장...상징 수목·조형물도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의 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번 추모식에선 참사 5년 만에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으나, 실제 조성까진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9일 오후 4시10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 참사유가족협의회 주최로 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 첫 순서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은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5년 전 윤립 54번 버스가 참사 현장을 지나다가 5층 건물의 붕괴에 휩쓸린 오후 4시22분께는 추모 묵념이 진행됐다.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5주기를 맞은 9일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추모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차분한 표정으로 추모 공연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떠나간 이들을 다시 떠올리고선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혔다.

대표로 헌화를 마친 이진의 유가족공동대표는 “첫 추모제를 시작으로 8번째 추모사를 준비

하며 이전의 원고를 꺼내봤는데, 5년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추모 공간 조성, 유가족 지원 등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수많은 정치인이 있지만, 6월10일이 되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음 해 6월9일에 비슷한 말을 해왔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은 말을 하실 거면 추모사를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추모 공간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늘의 추모가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평범한 일상이 비극으로 바뀌지 않도록 동구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선화 동구의장은 “추모는 슬픔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같은 상흔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 안전이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동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현산은 추모 공간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추모 공간 부지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될 ‘연결 녹지’ 중 약 100평으로, 신설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다.

이 공간은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수목과 조형물이 들어서며 계절에 따라 조경이 변화하는 ‘시간의 순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현산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현산은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해,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며 추모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사색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결 녹지 조성 자체가 학동 4구역 재개발과 맞물리는 만큼 추모 공간도 별도 공사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영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엄정 수사 필요”

시민단체 “어떤 이유라도 용납될 수 없다”

“조직적 부정선거 몰아가는 주장은 반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선관위 엄정 수사 및 시스템 혁신을 요구했다.

광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시민 참정권을 박탈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수천장이 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고 투표용지를 기다리다 불참한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인 투표의 권리를 박탈한 박탈한 것은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91곳이 넘게 투표 일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외부감사 없이 성역에 가깝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고위 간부 자녀 채용과 같은 인사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혁신과 견제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사태를 조직적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극우적 정치세력들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편승해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사회적 갈등

을 유발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형우 기자

친구 부모 차량 몰다 사고낸 중학생 입건

친구 부모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의 중학생 A(10대) 군을 조사 중이다.

앞서 A군은 이날 오전 1시1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사거리에서 친구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도됐고, 조수석에 있던 B(10대) 양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이 차량에는 A군과 B양 등 총 5명의 중학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동승자 친구 부모의 소유였고, 내부에 기가 쪼렷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연상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자들 구속 기로

경찰, 시공사 관계자 등 11명 ‘사전영장’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약 6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에 대해 최근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공사 책임자들이며 지난해 12월11일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구속영장 신청 전, 경찰은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에 의뢰했던 감정의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용접 불량 등 부실시공, 콘크리트 타설 미숙, 감리 소홀 등이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약 40명이며,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안재영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가출 청소년 성매수 20대 구속기소

가출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해온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0대) 씨를 전남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9월 15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가출 청소년이었는데, A씨는 SNS를 통해 이들을 알게 된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금전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 아동에 대해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주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실종아동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